

## 위기의 농업... 선진국형 농정으로 해법 모색 <農政>

대통령 직속 농특위, 어제 제주서 100인 원탁회의 생산·가격·품질 부문 집중됐던 기존 정책서 탈피 식량자급·환경보호 등 '공익기여지불' 확대 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정(農政)을 전환'에 대해 엿볼 수 있는 자리가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진행됐다. 매년 과잉생산으로 '가격 불안정'에 시달리고, 올해는 자연재해·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은 제주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는 자리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위원장 박진도)는 30일 제주시내 피서픽호텔에서 '농정을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 제주'를 개최했다. 농특위는 이날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전북, 경북, 경기, 충남 등 전국을 돌며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을 전환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행 농정들은 수입 농산물 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생산이나 가격·품질 부문에 예산을 집중, 수입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들은 ▷특정 작물 집중 ▷농촌 양극화 ▷농약 과다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

▷식량자급을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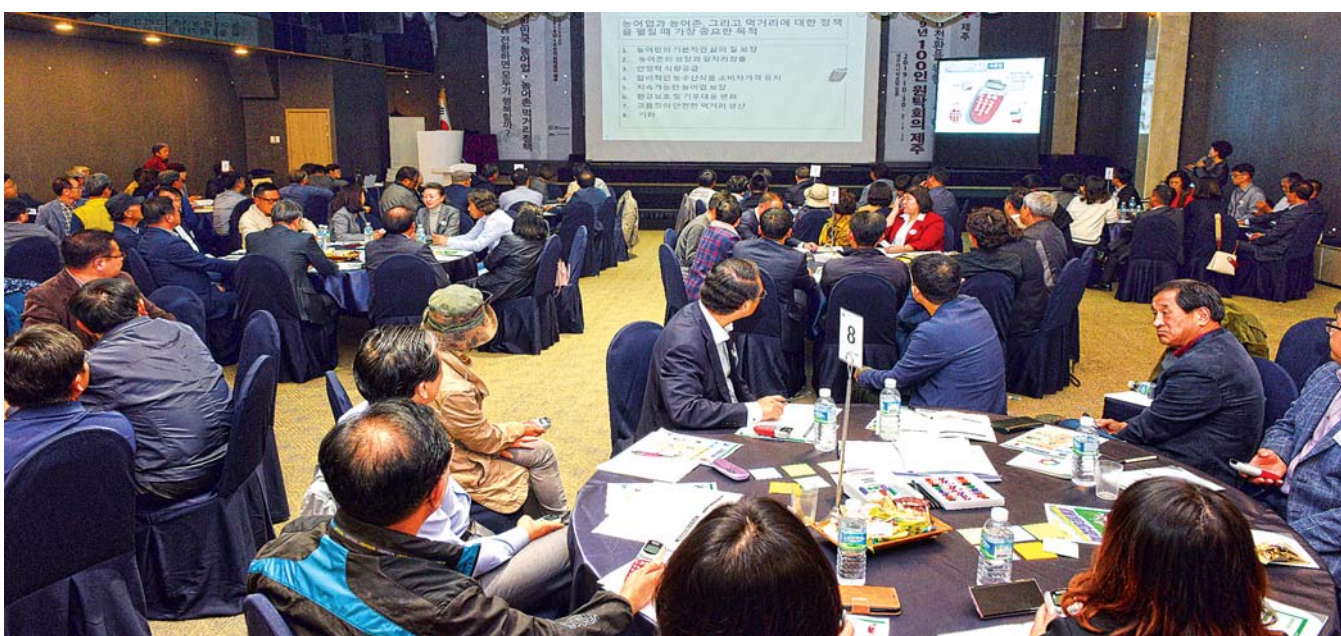
이에 따라 정부는 선진국형 농업틀인 '공익기여지불'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농촌활성화와 식량자급·환경보호 등 '공익적 부문'에 기여하는 농가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궁극적으로 전체 예산의 50%까지 늘리자는 것이다. 이 제도가 정착된 유럽의 경우 1개 농가가 연 5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3000만원은 이 공익기여지불로 수익을 얻고 있다.

제주는 1차산업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11.7%이고, 세계자연유산이나 국립공원 등 자연적 가치를 지닌 곳이 많기 때문에 공익적 부문 중 '환경보호', '농촌활성화'가 반영된 공익기여지불 제도가 부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농촌 고령화 대책 수립 ▷농협·수협 개혁 ▷생산·최저가격 보장 ▷농촌공동체 활성화 ▷농촌 교육·문화 서비스 질 제고 ▷친환경 농업 보상 확대 등의 의견을 농특위에 제시했다.

박진도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해 본래 갖고 있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할 것"이라며 "이는 개발도상국 농정에서 선진국 농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그 중심에는 공익기여지불이 자리하고 있다. 앞으로 농정예산의 최소 50% 이상이 되도록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참석했지만, 일정을 이유로 "나중에 나오는 자료를 열심히 검토하겠다"며 10여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가 30일 제주시 피서픽호텔에서 개최한 '농정을 전환을 위한 전국 순회 100인 원탁회의'에 참석한 농어업인 및 관계자들이 당면 현안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만들기 '박차'

제주도, 먼지 저감·배출조사 등 종합대책 수립  
조사·감시·감축 분야별 저감·관리대책 등 담겨

제주특별자치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시행계획은 2020~2024년 5개년 계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가 수립 중에 있는 국가 미세먼지 종합계획과 연계해 제주 실정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농도를 15µg/㎥까지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도내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미세먼지 배

출원 조사는 ▷미세먼지 발생 현황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특성 ▷산업, 교통, 선박·항만, 농축, 생활 분야 등 발생원현황 조사 등 3개분야로 이뤄지게 된다.

세부 실천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원 분야·단계별 저감 및 관리 계획을 비롯해 ▷미세먼지 인체 위해성 ▷취약계층 보호 방안 ▷홍보·교육·민관학시민단체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방안 등 4개분야로 수립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2016년도 기준 제주도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1214t으로 비산 먼지에서 가장 높고 비도로 이동 오염원, 생활성 연소, 도로이동 오염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비 1.2%로 발생

량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 미세먼지 발생 비율을 보면 건설공사, 도로재비산, 농업활동, 축산활동 등에 따른 비산먼지(42.89%)와 건설장비, 선박, 항공, 농업기계 등 비 도로이동 오염원(28.86%)과 농업잔재물 소각, 목재난로 및 보일러, 노천소각 등 생활성 연소(13.12%), 자동차 운행에 따른 도로이동 오염원(12.80%)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노후경유자동차 조폐차, 대기측정망(5~6개소) 확충, 오염감시 모니터링, 전기자동차 지원 등 22개 사업에 1205억원을 투자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불철 국내·외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제주도 최초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공사장 작업 단축 등을 시행했다. 조상윤기자

▶▶ 7면... 키워드로 읽는 중국문화 / 9면... 과잉관광 대안을 찾아서

'산불 없는 해' 제주 6년 연속 도전  
도,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

제주도가 '6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만들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지난 2013년 제주 추자도 및 월평동에서 일어난 것이 마지막이다.

이번 종합대책 기간에는 제주도와 한라산국립공원,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기상 여건에 따라 산불위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또 '읍·면·동 관리지역 책임제'를 실시하고, 소방서와 군부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도 구축한다.

아울러 산불감시원 125명·전문예방진화대원 120명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산불 예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며, 무인감시카메라 22개소, 무인방송시설 8개소, 드론 등도 활용된다. 진화차량 32대와 제주 산림항공관리소 소속 대형헬기 1대도 전진 배치된다. 송은범기자

세계지방자치단체 환경포럼  
내달 12일 사이버환경네트워크

제주도는 내달 12일 사이버환경네트워크(ENCYNET) 홈페이지에서 '제7회 세계지방자치단체 사이버환경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원순환사회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제주를 비롯해 몽골 울란바토르와 베트남 하이퐁, 말레이시아 랑카위 등 4개국·4개 도시가 참가한다.

포럼에서는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참가국 공무원 및 전문가가 자원순환정책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ENCYNET는 전 지구적 환경이슈에 대해 지역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 제주도가 세계자연보전총회(WCC) 특별회의에서 제안해 설립된 협의체다. 송은범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후원문의 064-753-3703 **어린이재단**

꿈은 접는 것이 아니라 펼치는 것이라고  
초록우산을 만나 깨닫습니다  
꿈이 있는 어린이의, 꿈이 있는 초록우산!

**기부로 어린이의 꿈을 펼쳐주세요**

**“어린이를 도울 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는 제주도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후원자들의 대표 모임으로, 재단의 아동복지사업 지원, 후원자 개발, 봉사 및 기부활동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후원회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